개헌론, 7·28 재보선후 탄력 받나

박지원 "원론적 공감…여건 조성되면 9월국회때 논의"

친박계 반발…여야 계파별 셈법 제각각 '험로' 예고

후반기 정국을 뜨겁게 달굴 이슈로 '개헌론'이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신임 대표가 15일 취임 첫 일성으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6일 원론적으로나마 공감을 표시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다시 서서히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사실 개헌 논의가 18대 국회 하반기를 장식할 것이란 전망은 오래전부터 예견됐다.

국회 내에 여야를 넘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이 대단히 많고 여권 주류와 민주당 등에게도 개헌에 따른 이해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개헌 논의는 여권 특히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개헌은 어디까지나 정치권의 몫"이라며 일정 정도 선을 긋고 있지만 개헌론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한나라당 당직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며 제한적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도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여건이 조성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논의해볼 만하다"고 원칙적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7·28 재보선' 이 끝나면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급물살에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헌은 '87년 체제'의 대수술이라는 단순한 헌법사적 의미를 넘어 권력구조의 대대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제 정당과 계파 간, 차기 대선주자들 간 현격한 입장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접점 모색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개헌 시기는 물론이고 대통령제냐 권력분산형 체제냐 등 개헌의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면전환용 성격의 개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4대강 사업 등 쟁점이 모두 정리돼야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는 극렬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친이(친이명박) 주류 측의 개헌 논의가 박근혜 전 대표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개헌 논의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올 후반기 정국의 최대 쟁점은 개헌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재정 위기탈출은 부자감세 철회부터"

민주 정책위, 교부세율 인상 등 극복 방안 제시

행안부, 지방채 초과 발행 수익성 검토 뒤 결정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대두된 지방재정 위기의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 해결책은 부자감세 철회"라며 정부의 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백원우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재정 수입이 5년간 총 18조6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재정의 위기는 첫째로 여기에서부터 온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며 "지방세수로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는 지자체가 24곳에 달하고 지난해보다 예산을 감액해 편성하는 곳도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지방재정 위기 대책으로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율 각각 1%포인트 인상 ▲3년간 한시적 지방재정 지원용 목적예비비 편성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주민참여예산제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자체가 지방채를 한도 이상 발행하려 할 때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심사 기준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행안부가 설정해 준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지방채 초과 발행 심의에는 지자체가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했는지 등의 다소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됐는데 여기에 정량적인 지표를 넣어 심사를 객관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인 암 사망률 '10만명당 161명' 亞 두번째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이 아시아에서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방식에 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보건통계를 정리해 펴낸 '한눈에 보는 보건지표-아시아판'에서 한국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161명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아시아 25개국중 몽골 289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OECD 평균 141명, 일본 120명, 북한 95명보다도 많다.

아시아권 국가들의 암종에서 17%를 차지하는 폐암에 이어 위암은 한국과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에서 기인해 두번째로 일반적이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北 김정일 '대계도 간석지' 현지 지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지난달 말 준공된 평안북도의 대계도간석지를 현지 지도했다. /연합뉴스

軍 "사거리 1500㎞ 국산 순항미사일 개발"

北 주요시설 모두 사정권…연내 중부전선 실전 배치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사정거리 1500㎞에 달하는 국산 순항(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7일 "국방과학연구소가 2008년부터 사정거리 1500㎞의 지대지 순항미사일인 '현무-3C'의 탐색개발에 들어가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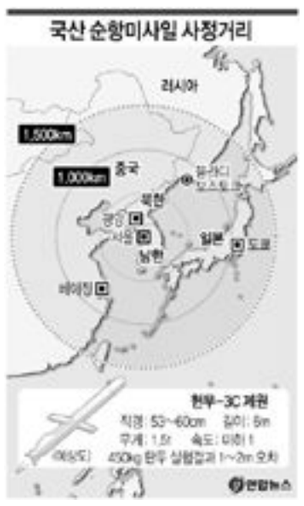
군은 올해 안으로 중부전선에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사정거리 500km인 '현무-3A', 사정거리 1000km인 '현무-3B'의 실전 배치 사실만 알려져 있었다.

사거리 1500㎞인 현무-3C가 실전에 배치되면 핵시설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이 모두 우리 군의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된다.

'현무-3C'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북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과 달리 목표물을 1~2m 오차로 명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1천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4번째 국가가 됐다. /연합뉴스



한·미 '동해 표기' 중립적 표현 사용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앞두고 현안으로 부각된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동쪽과 서쪽 해역'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로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2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인 공동성명에 동6서해 상에서 한미연합훈련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동해와 서해를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 해역(east and we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으로 표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오늘 '장기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토론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19일 광주교육대에서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인 강 의원은 "북구에 집중된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가 준공된 지 18~19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단지 내 상가들도 공실률이 28%에 이를 정도로 침체돼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상가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서민주거복지 향상에 관심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박2일 '쪽방생활' 체험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시 을)은 16~17일 참여연대가 주관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 UP 캠페인-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행사에 참석, 1박2일 간의 쪽방생활을 체험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 강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을 찾아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배달 자원봉사를 펼친 데 이어 용산구 동자동 쪽방마을에서 하루 식비 6300원으로 '하루 나기'에 도전, 쌀 2컵과 라면 2개, 계란 1개, 김치, 물 한통으로 세 끼를 해결했다. 체험을 마친 주 의원은 "현재의 최저생계비로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조차 불가능한 생존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운영위원장에

광주시의회는 제6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에 이춘문 의원(민주·서구1)을 선출했다. 운영위 간사에는 조오섭 의원(민주·북구 2)이 선임됐다. 이에 따라 제6대 광주시의회의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임이 모두 마무리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